

남해화학, 폐기물 관리위반 “억울”

여수시, 시설검사 미이행 검찰에 고발 ... 개선조치 불구 검사 거부

남해화학이 폐기물 관리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남해화학이 1974년 공장 건설과 함께 비료제조 공정에서 생긴 부산물인 석고 2000만톤 가량을 지금까지 주변 53만㎡ 폐기물처리장에 야적하는 과정에서 유해 침출수를 발생시켜 환경문제를 일으켜왔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검사 미이행, 폐기물 관리기준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남해화학 관계자는 “비료제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석고를 쌓아둔 야적장에서 1999년 침출수 문제가 발생해 2002년에 250억원을 들여 침출수 차수벽 공사 등 개선 조치를 하고 당국이 지정한 농업기반공사 등에 시설검사를 의뢰했으나 적용할 관련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검사를 해주지 않았다”며 “시설검사를 의뢰했는데도 해주지 않은 책임을 수년이 지나 뒤늦게 묻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또 “2002년 개선조치를 시행할 당시에도 행정기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공동대책협위까지 구성해 협의를 거쳤다”며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큰데도 여수시가 사전 예고도 없이 고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여수시 관계자는 “남해화학의 항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만, 현재까지 폐기물처리장 시설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은 것 등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여수시는 또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낙장조치라는 비난에 대해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남해화학 문제가 크게 제기됐고 시의회에서도 현장조사를 하는 등 파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29>